

제 3 교시

논술

성명

수험 번호

1. <입법정책>과 <사례>를 읽고 <논거>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각 <사례>의 문제점을 요약하고, 자신이 선택한 <입법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를 기술하고 다른 정책을 반박할 것
- 2. 지지 또는 반박하는 경우 관련된 <논거>를 활용할 것
- 3. <논거>를 활용할 때는 논거①, 논거②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할 것

<입법정책>

1안: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 이후에도 행정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

2안: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며, 설립 이후에도 행정관청이 법인의 활동에 특별히 개입하지 않는 방안

※ 법인이란 사람 외에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사례>

<사례 1>

X국의 A법인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운영비는 주로 회원들의 회비 및 후원 기관의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A법인은 설립 목적에 맞게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취업 알선, 인권 보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 지출 내역 등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최근 최부자 씨도 부를 대물림하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을 구상 중이지만,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저하고 있다. X국에는 최부자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설립된 공익법인은 별로 없다.

<사례 2>

Y국의 B법인은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단체의 대표자는 전국 20개 지점의 전화 상담사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라고 소개하면서 '지역에 있는 소외 계층 아동들의 나눔 교육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신의 계좌에서 월 1만 원씩 자동 출금하게 하여, 그 금액이 총 100억 원 정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임직원들의 급여와 업무용 차량 구입 및 해외 연수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전체 20% 정도가 학생들의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논거>

- ① 고대에는 노예가 단지 물건으로 취급되어 거래의 대상이었다. 근대에는 개인을 중시하고, 개인을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이해하며, 이성에 의한 인격의 자유로운 실현을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로 본다. 현대에는 법인 설립과 운영도 인격의 자유로운 실현으로 보아 법인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 ② 사람과 달리, 법인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 법률이 인위적 기술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법인의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어떤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되는지 알 수 없고 법인이 마구 설립될 우려가 있다. 어떤 단체가 법인으로 설립되면 그 목적으로 삼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외부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 ③ 미래경영학자 드러커(Drucker)는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정부(제1섹터)나 기업(제2섹터)의 역할보다 비영리조직(NPO)을 중심으로 한 제3섹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정부는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영리사업을 마냥 늘릴 수 없고 기업은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근원적 한계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의 자유로운 설립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 ④ 로마법학자 사비니(Savigny)는 권리를 인간의 의사 지배로 보면서, "모든 권리는 개개인에 내재하는 도덕적인 자유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그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는 원래 사람의 개념과 일치하지만, 인간의 집단적인 자유의 실현도 가능하도록 법인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법인이란 사람의 자유와 결부된 것이지 사람을 벗어난 새로운 주체는 아니다.
- ⑤ 법인은 그 구성원과는 별개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어떤 단체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사업체에 불과하거나 그 사람에게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외형상 법인의 행위임을 이유로 법인만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사람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

2. <사례>와 <의견>을 읽고 <조건>에 따라 토론할 내용을 작성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1. <사례>의 갑과 을의 발표 중 지지하는 견해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기술할 것
2. <의견>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여 자신이 선택한 견해를 강화하고, 지지하지 않는 견해를 반박할 것
3. <의견>을 활용할 때는 의견①, 의견②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할 것

<사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생률이라고 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0.78명이었던 합계출생률은 작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올해는 0.7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연구보고서는 내년에 합계출생률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가 2025년 3,591만 명에서 2040년 2,910만 명이 되어 약 8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인구정책학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갑과 을이 발표자로 나서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여러분은 이 세미나에서 갑과 을의 발표에 대해 토론하여야 한다.

갑: 생산가능인구의 회복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결혼하지 않거나 출생률이 떨어져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면 결국 결혼과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기업과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보조금 제도는 비혼자의 인공수정이나 해외 입양 등으로 아이를 갖는 사람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을: 결혼과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부 인구과밀 국가에서 산아 제한을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벌금을 매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하지 않다. 결혼과 임신은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혼과 임신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공정한 세금의 배분이 된다.

<의견>

- ① 보조금 제도는 결혼과 출생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지만, 결혼한 부부는 늘어난 가족으로 인해 더 많은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보조금으로는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저소득층은 더 큰 생활고를 겪을 수도 있다.
- ② 보조금 제도는 저임금이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주저하는 2~30대의 교제와 결혼을 장려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비싼 교육비와 양육비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어 자녀를 낳으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일부 국가는 자국의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고용 연장 및 여성 취업 장려를 통해 국내 노동인구를 적절히 재배치하고, 취업비자 확대나 이민 수용 등 외국인력 도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④ 보조금 제도는 사람들에게 결혼과 출생에는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이 따른다는 기대를 갖게 하여 경제 논리에 의해 결혼과 출생이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왜곡된 가족이 형성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 ⑤ 아이를 가지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 아이에게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며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여하겠다는 결심의 실천이다. 따라서 결혼과 출생에 경제적인 고려가 뒤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 ⑥ 보조금 제도는 자녀 수에 따른 세금 감면이나 공공요금의 지원과 아울러 기업이 임신이나 육아를 위한 휴직제도 및 돌봄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으면 정부 지원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와 병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⑦ 보조금 제도와 상관없이 결혼과 임신을 계획했던 사람도 국내외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해 기대했던 보조금 지급이 줄거나 중단된다면 결혼과 임신을 주저하게 되어 더 큰 인구 급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의 분량 미달과 분량 초과는 같은 기준으로 감점됩니다.